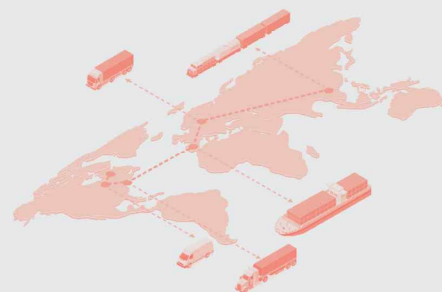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목 차

제1장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6
제1절 총 평	6
제2절 2022년 중간선거 결과	7
제2장 주요 정책별 선거 영향 분석	8
제1절 경제정책	8
제2절 통상정책	9
제3절 산업정책	11
제4절 국내정책 및 기타	13
제3장 현지 기관 및 업계 반응	15
제1절 현지 기관 반응	15
제2절 현지 기업 반응	18
제4장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9
제1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	18
제2절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 및 시사점	19
제3절 미국의 공급망 재편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
[참고] 레임덕 세션 내 주요 정책·법안 논의 동향	21

요 약

I.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 118대 의회는 분할 의회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양분
 - (상원) 민주당 50 vs 공화 49, (하원) 민주당 213 vs 공화 220 (11.29 기준)
 -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기존 예측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며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
 - * 조지아주 결선투표(12.6)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50:50)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권한으로 캐스팅보트(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 행사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II. 주요 정책별 선거 영향 분석

- (경제정책) 재정지출 축소 기조로 돌입할 전망
 -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 지출 확대 계획 견제 전망
 - 긴축 기조에도 공화당 선거 공약인 '17년 감세 정책 영구화와 OECD, G20에서 논의된 국제 최저 법인세율(15%) 도입 반대 추진 예상
- (통상정책) 대중(對中)정책 강화 및 다자간 무역 논의 견제 전망
 - 대중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강화 전망
 - 수입규제(232조, CBAM) 논의 활성화 및 다자간 무역(IPEF 등) 난항 예상
- (산업정책) 공화당 '선택 산업' 진흥 노력이 두드러질 전망
 - 기존 친환경 정책과 전통 에너지 진흥 정책 병행 전망
 - 첨단 기술 정책 내 미국 기술 우위·시장 영향력 활용 기조 지속
- (국내 정책 및 기타) 사회 이슈 관련 양당 간 첨예한 대립 지속
 - 이념적 국내 안건 해결 정체로 '24년 대선까지 양당 갈등 고조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현안에 대한 양당 협력은 지속 전망

III- I.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분할 의회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多
 - 공화당은 하원의 예산 영향력을 이용, '23년 주요 정부 예산 편성 시기마다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할 가능성이 큼
 - 민주당 상원 승리와 상원 필리버스터 가능성으로 주요 정책이 원상복구 되거나 공화당 주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긴 어려울 전망

- 공화당 하원 승리에도 친환경 정책이 급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
 - 많은 공화당 우세지역은 IRA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혜택 수혜 지역
 - 전기차·배터리는 IRA로 선거 전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선거 영향 미미

III-II.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 (철강 업계) 탄소국경세 제도 동향에 유의
 - 민주당 상원 승리로 탄소국경세 제도가 일부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 존재
 - '美 탄소국경세도에 상응' 조건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 (자동차 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 동향 예의주시
 - 전통 에너지 옹호 움직임으로 IRA 법안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
 - 일부 의원들의 韓 기업 옹호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低
- (반도체 업계) 대중 반도체 기술 견제에 필요성에 초당적 공감
 -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및 반도체 법안 가드레일 조항 유지 전망
 - 반도체 법안 수혜를 두고 우리 기업 영향 가능성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완화 가능성 제기
 - WTO 무역분쟁 소지와 동맹관계 악화 우려로 협상 가능성 증대
 -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담으로 생산지 조항 일부 완화 기대 존재
-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 강화 전망에 대비 필요
 - 미국이 규정한 우려퇴를 배제한 시장 진출전략 및 공급망 구상 필요
 - 재편 과정 속 현실적 한계로 동맹국의 미국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USMCA 기반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 대응 필요
 - IPEF 내 신규 분쟁 조정기구 도입 대비한 활용·대응 방안 구상 필요
 - 협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협상안을 사전 발굴할 필요성 증대

I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1. 총 평

- '22.11.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과 같이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은 상원 50석, 하원 213석, 주지사 24석을 확보했으며, 공화당은 상원 49석, 하원 220석, 주지사 25석을 확보(11.29 기준)
 - * 조지아주 결선투표(12.6) 이후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권한으로 캐스팅보트(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 행사로 상원 다수
-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現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영향 가능성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 불가피
- 現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중간선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공화당 압승이 예상됐으나, 집권당이 상원을 지키며 선방
 - 주요 언론은 反트럼프 기조, 낙태권 보장 등의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을 집결시킨 것으로 분석하며, 트럼프 前 대통령의 선거 영향력을 부정적 평가
 - 공화당이 하원을 낮은 의석수 격차로 승리하며 의회 장악력은 기대보다 약해졌으나, 분할 의회에 따른 향후 2년간의 국정운영 험로는 불가피
- 공화당의 영향력 확대로 입법·행정 부처 간 교착 가능성 多
 - 공화당 하원은 높은 확률로 세금, 교육, 이민, 정부 지출 등 주요 안전에 관한 보수적인 법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호, 탄소 배출량 감소, 인플레이션 완화 등 주요 의제 우선순위를 행정명령에 의존해 처리할 전망

2. 2022년 중간선거 결과

가. 상 원

- 상원 100석 중 5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기존대로 다수당 지위 유지 확정
 - 전체 상원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총 35석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117대와 같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유력(조지아주 승리 시 51석)
 -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49.4%)가 공화당 허셀 위커(48.5%) 후보를 앞섰으나, 공식 결과는 **12월 6일 재선거(Runoff)*** 이후 확정 전망
 - * 후보 최다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시행하는 조지아 주법 의거

나. 하 원

- 하원 전체 435개 선거구에서 공화당이 220석을 차지(과반수 218석)하며, 213명 당선에 그친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 탈환(11.29 기준)
 - 공화당은 '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115대 의회 이후 5년 만에 하원 장악에 성공하여, 118대 하원 대표는 케빈 매카시 의원 당선에 유력

<2022년 미국 중간선거(11.8) 결과에 따른 양당의 상·하원 의석 변화>

	117대 의회				118대 의회			
	민주	공화	무소속	공석	민주	공화	무소속	공석*
상 원	48	50	2		50	49		1
하 원	220	212		3	213	220		2

* 주: 118대 의회 공석은 내년 1.3 출범 이전 결정될 예정

[자료: 현지 언론 종합]

다. 주지사

- 전국 36개 주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 18명, 공화당 후보는 18명이 당선되어 지방 권력 또한 양분
 - 다만,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주지사 자리를 탈환하며 2석을 추가해, 지방 정부 영향력 증대

II 주요 정책별 선거 영향 분석

1. 경제정책

- (재정지출) 공화당이 민주당의 경기부양·증세 정책에 제동을 걸며 정부 재정적자 폭을 일부 축소할 전망
 -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공화당은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공 인프라 정책과 정부 지출 확대 계획을 견제할 전망
 - * 공화당은 America Rescue Plan Act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해옴
 - 회계연도 2023 정부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22년 확대한 사회·복지·기후 등 비국방예산의 규모를 일부 감축하고 국방예산을 소폭 인상할 가능성
- (세제 정책)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공화당은 '25년 만료될 공화당의 '17년 감세 정책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OECD, G20에서 합의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15%) 도입을 반대할 전망
- (금융) 양당 분할 의회 출범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고 전망
 -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양분화된 의회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다만, 월가에는 선거 이전부터 분할 의회 가능성에 무게를 뒀은 바, 이런 예측이 최근 주식 하락세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기준금리)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현재 예정된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현재 경제성장과 목표 물가상승률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전망이며, 현지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목표치는 4.75~5.25%
 -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가 실제 수치보다 2% 높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인상 속도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
 - * 10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7.7% 인상, 6월(9.1%), 9월*8.2%) 대비 상승세 완화

2. 통상정책

□ (대중정책) 초당적인 지지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강화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으로 공표
 - *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22.10.12)
- 경쟁 우위 전략으로 △ 자국 산업 투자 증대, △동맹 외교 강화, △왜곡된 시장 관행·경제모델 견제, △ 21세기 새로운 인도-태평양 관계 구축 제시
- 기타 첨단 기술 관련 품목에도 수출통제가 적용될 가능성 상존
 -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분야 관련 고강도 수출통제가 바이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 내 지속해서 확장할 전망
- 중국 에너지 기업 견제 가능성도 제기 중
 - 양당 의원은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선거 이후 대중 LNG 수출통제와 중국 에너지 회사의 무역 블랙리스트 등재 검토 필요성 주장
 - * 마이클 매콜(공화당 하원의원), 마크 워너(민주당 상원의원)
- 아웃바운드(Outbound) 투자 모니터링 도입 논의 활성화 전망
 - 대표 법안으로 국방핵심역량수호법(NCCDA)이 논의될 전망이며, 동 법안은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 감시'에 이어, 주요 첨단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우려국 기업에 대한 미국·동맹국의 투자를 감시할 가능성도 존재
-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 정책도 강화될 전망
 - 공화당 의원*들은 신장 産 제품 수입금지 규정인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우회 사례** 단속을 위한 법안 강화 의지를 시사
 - *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하원의원)
 - ** 일부 기업에서 제조업체 대신 수출업체를 '제조사'로 표기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우회하는 경우 발생

- (수입규제) 공화당 영향력 강화로 일부 수입규제 관련 논의 확대 전망
 - (철강·알루미늄 232조) 공화당 하원 주도로 관련 상무부 청문회 추진 예정
 - 하원 감독·개혁(Oversight and Reform) 위원회는 상무부의 알루미늄 232조 관세 유지 배경에 관한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힘. * 제임스 코머(공화당 하원)
 - (탄소국경조정제도) 공화당 반대로 입법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으나, 우려국 한정 부과 가능성은 배제 불가
 - 공화당이 포괄적인 적용보다, 특정 우려국(중국·러시아)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한 후 기후·무역 의제로 압박하는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고려됨.
- (무역협정) 공화당 견제로 다자간 협정의 추진 동력 감소
 - (IPEF) 협정 체결을 위한 의회 우회 노력이 지속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과 같이 IPEF를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집중할 전망
 - △ 인도의 무역 조항 불참에 따른 한계, △ 주요 조항에 대한 구속력 부재, △ 구체적인 인센티브 발굴 난항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공화당 공세 강화 전망
 - (자유무역) 하원 세입 위원회 주도의 자유무역 추진 압박 증대 전망
 - 하원 세입 위원회의 주요 의원들(제이슨 스미스, 번 뷰캐넌, 아드리안 스미스)은 친자유무역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며, 세입 위원회는 최근 영국에 美-英 FTA 협상 추진을 지지하는 서한 발송(10.12)

3. 산업정책

□ (에너지) 기존 친환경 정책과 전통 에너지 진흥 정책 간 갈등 확대

- (친환경) 공화당 견제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 투자의 속도 완화 전망
 - 민주당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화당 하원은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견제
 -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한 IRA는 공화당 공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예산 집행과 관련한 잦은 조사와 공청회로 예산 집행 과정이 지연될 전망
- (전통 에너지) 공화당 하원 승리로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전통 에너지 산업 보호를 강조할 전망
 - 공화당 주도 하원 에너지·통상(E&C) 위원회는 화석연료와 더불어 수소, 원전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LNG 수출 인허가 심사 간소화 정책을 추진할 전망
 - * Securing Cleaner American Energy Agenda를 통해 석유, 가스 생산 패스트트랙 제정과 국내 파이프라인(keystone)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공화당의 에너지 전략이 전통 에너지 수호에 제한되기보다 ‘에너지가 풍족한 미국(American energy abundance)’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
 - * The Hill 설문조사 : 공화당 유권자 중 62%(청년 비율 78%)는 재생 에너지 확대 지지

□ (첨단 기술) 기술 우위와 시장 영향력을 정책에 활용하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

- (반도체)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 규제는 강화될 전망
 - 상무부와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권한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공화당 하원 법안(Prioritizing National Security in Export Controls Act of 2022) 주목 필요
 - * ‘20~21년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거부추정원칙을 상무부가 미준수한 사례가 적발돼 하원은 과거 상무부로 일부 이전된 국방부의 수출통제 권한 회수를 희망
 - 공화당 의원은 산업안보국의 수출 허가 전례를 전수 조사하기 위해 상무부에 첨단 기술 수출 허가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며, 산업안보국이 개별기업 수출 통제 시 활용 중인 ‘서한 통지’ 규정도 엄격화할 것으로 언급
 - *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매콜(공화당 하원의원)

- **(배터리) 민주당 입법 노력을 통해 기반이 마련돼 선거 영향 미미**
 - 바이든 행정부는 **IRA 법안 서명 이후 3개월 만에** 배터리 원자재 생산과 배터리·전기차 제조에 대한 **13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
 - * 배터리 제조 : 92억 달러, 배터리 소재 생산 : 24억 달러, 전기차 제조 : 15억 달러
 - 유치된 산업 투자 계획들은 '27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며, 공화당은 선거 이후에도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바이오) 보건 예산 감축 및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 전망**
 -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대비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온 국가 면역강화 전략의 예산 확보에 협력할 가능성이 적어, 이와 연계된 바이오 물품 자국 제조 역량 강화 정책의 동력도 약화 가능성
 -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WTO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며 무역대표부 청문회를 예고함에 따라, 바이오 시장 내 미국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화당 움직임은 강화될 전망
 - * 케빈 브래디(공화당 세입 위원회), 아드리안 스미스(공화당 무역 소위원회)
- **(희토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차기 의회 재론 유력**
 - * REEShore Act :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 상·하원 법안 발의자 4명 모두 차기 의회 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118대 의회에서 동 법안이 논의·통과될 가능성 증대
 - * 톰 코튼(공 상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 하원), 마크 켈리(민 상원), 조쉬 고트하이머(민 하원)
 - 동 법안은 관련 부처에 △ 희토류 전략 비축물자 확보, △ 희토류 원산지 정보 공개, △ 미국 첨단 무기 체계 내 중국 희토류 배제, △ 희토류 공급망 내 중국 불공정 무역 조사 등을 지시

4. 국내 정책 및 기타

□ 사회 이슈와 관련된 양당 간 첨예한 대립은 지속될 전망

- 분할 의회로 총기 규제, 낙태권 보장, 교육·사회보장제도 등의 이념적 안건 해결이 정체돼 '24년 대선까지 양당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

① (낙태권) 낙태권 보장 법제화 추진 동력 감소

- 공화당의 연방대법원 낙태권 위헌 결정 수호 노력에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은 민주당 우세지역을 위한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을 고안할 전망

② (총기 규제) 총기 규제를 놓고 양당 간 갈등 심화 예상

- 공화당 하원 승리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민주당 우세지역은 주지사 주도의 주별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 존재
- * 미국인 64%는 총기 규제에 찬성, 이 중 공화당 지지자는 19%에 불과 (PEW Research)

③ (이민정책) 이민자 수용에 배타적인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갈등 예상

- 공화당은 국경 강화 정책의 추가예산 지원을 두고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정책을 완화해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로 제시
- *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했으나, 최근 대법원 위법 판결로 법안 향방이 의회 내 논의 중

④ (보건시스템) 민주당 주도로 강화돼온 사회보장제도 약화 전망

- 공화당 하원 승리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연금과 노인의료보험(Medicare) 수령 연령 기준 상향(기존 66세→ 70세) 전망
- * 공화당은 '23년 7월까지 미국 부채한도 합의를 두고 사회복지 비용 감축을 요구할 전망

□ 대외 현안에 대한 양당 협력은 지속될 전망

- 분할 의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재조정, 대북 제재 등 대외 현안에 대한 양당 협력은 118대 의회에도 지속될 전망

① (러·우 사태) 지원 방안은 논의 대상, 초당적 우크라이나 지지는 유지

-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원책에 대해 예산 감독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NATO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백지수표' 발행 중단을 제기해옴.
* 공화당은 상기 사유로 4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반대한 전례가 있음.(225)
- 양당 모두 행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도입 노력을 지지하는 관계로, G7 고정 유가 상한제는 계획대로 '22.12.5일 도입' 전망
* 상한가 : 배럴 당 60달러 전망, 23년 2월까지 석유 부가제품 관련 제재안 공개 전망

② (사우디 관계)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의 10월 감산 결정을 주도한 것에 대해 다수의 양당 의원이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관계 개선 노력 약화 전망

- OPEC+의 감산을 독점 행위로 규정할 경우, 상원 사법 위원회에서 통과된 (22.5.5) NOPEC(석유 관계자 반독점법)을 의회에서 논의할 가능성 증대
- 현지 관계자들은 NOPEC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으며, 법안 논의 동향을 사우디를 향한 외교적 메시지로 고려

③ (대북제재) 핵확산과 향후 도발 억제 노력 강화

- 공화당 하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러시아 포탄 지원 의혹, 국지도발 수위 강화, 7차 핵실험 가능성 고조를 두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될 전망

III 현지 기관 및 기업 반응

1. 현지 기관 반응

- (기조) 분할 의회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多
 - 공화당 하원은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23년에 정부 예산 편성 시기마다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할 가능성이 큼
 - JP 모건은 분할 의회 상황에서는 '23년 미국 경기 악화에도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3년 주요 정부 예산 편성 시기>

일자	항목
22.12.16	정부 예산 만기일
23.01.01	R&D 징세 연기 정책 만기일
23.04.15	정부 예산안 제출 만기일
23.06.01	정부 예산안 논의 시일
23.07.01	부채상환선 유예 논의 시일
23.09.30	정부 예산 만기일

[자료: Bloomberg]

- (경제) 공화당의 경제 관련 공약 추진 난항 가능성
 - 선거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에 회의적 견해 존재
 - WSJ은 민주당 상원 승리에 따라 의회의 연준 정책 개입 가능성을 낮게 분석
 - * 행정부는 연준 위원 임명에 필요한 상원 동의를 민주당 승리로 확보
 - 공화당 법인세 조정은 대통령 거부권 유도 전략
 - 상원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인해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증세 정책을 원복하거나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 네일 브래들리(미상공회의소 부회장)
 - WP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공화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목적은 세금 감면안에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유도해 다른 주요 입법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함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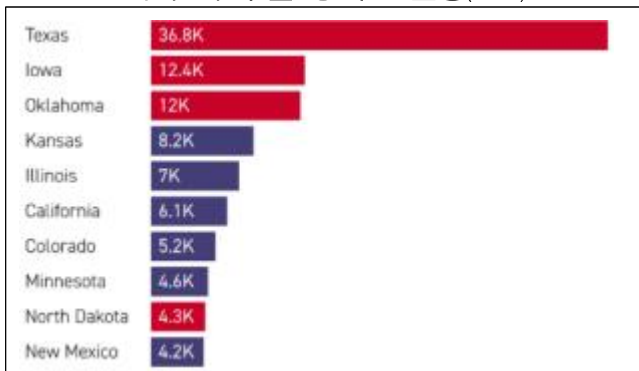
□ (통상) 공화당 하원 승리에 따른 다양한 통상환경 전망 제기

- 현지 연구소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공화당이 산업안보국(BIS)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
 - 공화당의 요구로 BIS를 상무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직제 개편할 가능성도 있으며, 추후 수출통제법안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
- 파이낸셜타임스는 공화당의 무역촉진권한(TPA) 재추진에도 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하원이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견제하고, 자유무역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정책 협상 과정에서의 기조 변화 모니터링은 필요
- 미국 외교협회(CFR)는 공화당의 현 정부 통상정책 수정 노력에 제언
 - (1)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대중 관세 완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2) 공급망 재구축과 동맹 관계 개선을 위해 규제 장벽 완화, 자유무역 추진과 IRA 자국 생산 조항 완화 노력을 강조

□ (친환경) 일부 공화당 우세지역의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산업 규모가 커, 공화당 하원 승리에도 친환경 정책이 급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폴리티코는 많은 공화당 우세지역도 IRA의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해(22.8월 기준) 정책 변화 여부는 지속 모니터링 필요

<미국 내 주별 풍력 발전량(MW)>



[자료: Polit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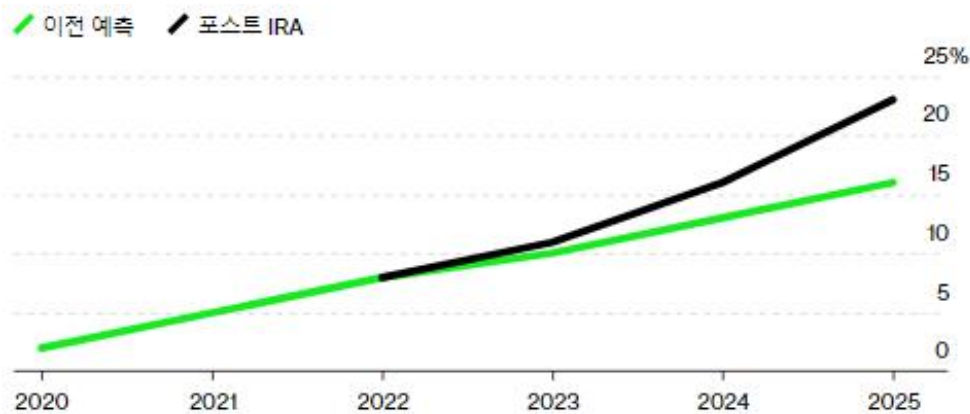
<미국 내 주별 태양광 발전량(MW)>



[자료: Politico]

- 블룸버그는 IRA 입법을 통해 유치된 산업 투자액으로 인해 공화당의 하원 승리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RA 입법은 시장에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21세기 석유로 고려하고, 관련된 충분한 투자를 제공할 것이란 인식을 선거 전 확립시킨 것으로 평가

<IRA 입법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전망>



[자료: Bloomberg NEF]

- (정부 조달) 정부 조달을 통한 친환경 산업 기회는 유지될 전망
 - 민주당 상원 승리로 연방 정부 주관의 탈탄소 사업은 진행 가능성 확보
 - 미연방조달청(GSA)은 '45년까지 연방 정부 건물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건설 자재 구매(21억 5천만 달러)를 발표했으며, '50년까지 연방 정부의 탄소 중립화를 위한 전환·유지 투자(1억 2천만 달러)를 선언
- (제조업)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제조업 우대 정책 유지 전망
 - 전미제조자협회(NAM)는 성명을 통해 양당 의원 모두 미국 제조산업 육성과 제조업 근로자 우대에 큰 관심을 보여 관련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주장
 - 주요 정책으로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및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신기술 관련 제조업 육성과 관련 인력 육성 정책 제기
 -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을 강조해온 점과 양당이 대중경쟁력 향상을 지지해온 점을 두고 첨단 제조업 활성화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

2. 현지 기업 반응

□ 철강업계(국내 A사)

-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 집중
 -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하면서, 철강업계에 불리한 탄소국경세 제도가 일부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
 - 미국 의회는 상·하원에 계류된 Clean Competition Act와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로 미국 탄소국경제도에 상응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제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내용(톤당 55달러 정도)을 검토 중
 - ‘미국 탄소국경제도에 상응하는’ 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 일부 WTO 조항 위반 소지도 있으나, 최근 동향을 고려할 시 강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자동차 업계(국내 B사)

- IRA 관련 협의 움직임이 약화할 가능성도 존재
 - 공화당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IRA 법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IRA 법안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 존재
 - 조지아 주지사나 의원들이 우리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

□ 반도체 업계(전미반도체협회)

-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반도체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 없음.
 -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반도체 법안 수혜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 이행 여부를 두고 우리기업 영향 가능성
 - * 미국기업의 경우, IBM 이외 중국 공장·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없어 변화가 없을 전망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

- IRA 시행령 일부 현실화·유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IRA 일부 예산 폐기 의지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개정 공청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전기차 보조금) 초당적인 국내 산업 보호 의지로 선거 영향은 적을 전망
 - 다만,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세제 혜택과 원산지 비중 조항이 WTO 무역 분쟁 소지와 동맹과의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중
 - * Raphael Warnock 민주당 상원의원은 IRA 최종 조립 조항을 '2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동맹국과 전기차 보조금을 두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있어, 재무부 IRA 의견 접수 이후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상존
- (자국산 조항) 배터리 핵심 광물의 복미 채굴 의무화 개정 가능성 증대
 - 공화당 의원들이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과도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담을 주장해온바, 생산지 조항 일부 완화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공화당이 IRA 자국 생산 의무화 조항 중 최종 조립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도 일부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 증대

2.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 및 시사점

- 공화당의 구속력 강화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 주시 필요
 - IPEF 내 시장 개방, 구속력 강화를 위해 USMCA 형식의 분쟁 조정 장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의제 구상 필요
 - * Elizabeth Warren, Bob Casey 민주당 상원의원도 노동·환경 조항의 구속력 강화 주장
 - USMCA 분쟁 조정 장치는 총 4단계로 구성되며 (1) 30일 내 협의 개시, (2) 75일간의 협의 기간 제공, (3) 합의 실패 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4) 패소 시 손해액 상계를 위한 보복 조치권 부여

- 무역 보복 조치권은 전방위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한 산업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손해액을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로 징수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구속력 강화에 따른 혜택 논의 활성화 기대
 - 행정부의 무역 정책 내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재'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바, 구속력 강화 추진 과정에서 참여국·동맹국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혜택과 관련된 논의도 활성화될 가능성 존재
 - 인센티브 논의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계에 제시할 우리 기업과 산업에 이익이 될 협상안을 사전 발굴할 필요성 증대

3. 미국의 공급망 재편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 공화당도 대중 의존도 완화 목표의 시기와 완급 조절을 강조할 뿐, 정책 목적과 달성은 지지해온 바,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대비 필요
 -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이 규정한 우려국 이외의 시장 진출과 우려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상 필요성 증대
 - 공화당은 기술 규제와 자국산 우대조항을 강화하고 기술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확대 적용을 지지할 가능성 多
 -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미국의 수출통제안에 우리 정부·기업 대비 필요
 - *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 美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판매 금지한 규칙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동맹국의 시장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으로, 지속 관찰을 통한 참여 기회 유지가 중요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법안, IRA 법안 등을 활용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바이아메리카를 적용해 자국 기업·산업에 혜택을 우선 제공하려 했으나,
 - 연방고속도로청, 국가통신정보청 등 주요 집행 기관들은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8.31), 광역 통신망 구축(9.19) 사업 내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를 연이어 발표함.
 - 이에 따라, 미국 내 동시다발적인 사업 수요 충족, 비용 부담 경감과 주요 교역국의 우려 완화를 위해 미국 시장 진출 제약이 완화할 가능성 존재

참고

레이믹 세션 내 주요 정책·법안 논의 동향

※ 레임덕 세션 :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 공식 출범 이전까지 소집되는 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

□ 117대 ‘레이믹 세션’ 동안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 백악관, 레임덕 세션 내 의회의 ‘4대 현안’ 처리 촉구
 -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17대 의회 ‘레이믹 세션’이 다뤄야 할 네 가지 현안 발표**
 - (1) 정부예산 확대, (2)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3)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4) 여당 임명직 인사 인준
 - * 동성결혼 합법화는 ‘레이믹 세션’ 개최 이후 상원의 초당적 합의 도달(11.14)
 - 특히, 정부예산 확대를 통해 국내 자연재해 복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백악관은 여당 성향의 대법관 인준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 복귀와 바이든 정부의 행정력 강화를 강조
- 민주당과 행정부는 국가 부채한도 상한 조정을 강조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될 118대 의회 개최 이전에 美 회계연도 2023 국가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
 -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인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며 부채 상한 조정을 촉구
-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및 수입 규제 관련 논의 강조
 - 백악관은 117대 의회 ‘레이믹 세션’ 동안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개혁안이 포함된 회계연도 2023 국방수권법 통과 주문
 - * 개혁안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친환경 및 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를 요구
 - 또한 ‘20년 중단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으로 개도국 대상 관세 특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현지 언론이 바라본 레임덕 세션 동향

- The Hill, 118대 의회 하원 리더십 교체 전 민주당 주요 법안 통과 시급
 - 118대 의회 하원의장에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레임덕 세션 내 민주당 의제에 부합하는 예산안 처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
 - IRA, 친환경, 복지 등 민주당 의제와 밀접한 '23 회계연도 예산의 증액과 국방수권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결집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
 - 또한 동성 결혼,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개정 등 민주당의 당론과 부합하는 이슈에 양원이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 “연방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막는 것이 최우선”
 - 블룸버그는 지난해 초당적으로 합의한 31.4조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가 내년 10월에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며, 정부 기관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부채한도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 특히 공화당은 중간선거 공약으로 물가 상승세 완화를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며 118대 의회 하원에서 다수당 승리로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을 두고 여야 간 난항이 전망

[참고자료]

An Inflation-Driven Midterm Will Not Change Biden's Economic Focus, NYT, 11.10.22

At Greenbuild, GSA Administrator Makes Commitment Toward Achieving Net-Zero Portfolio, GSA. 11.2022.

Broad Public Approval of New Gun Law, but Few Say It Will Do a Lot To Stem Gun Violence, PEW Research. 07.2022.

Bianchi_IPEF countries supportive of executive agreement format, InsideTrade, 9.9.22

Business (and trade frictions with partners) as usual in Washington, FT, 11.14.22

Commitment to America_2022

Democratic Party Platform_2020

Eyeing the gavel, Buchanan steps up free trade pressure, Politico, 11.11.22

House Republicans Threatens Debt Ceiling Fight For Spending Cuts, Yahoo, 1018.22

How the 2022 Midterm Elections Could Affect Your Federal Taxes, NBC, 10.26.22

How the US Midterm Elections Could Affect Companies' Profits, Bloomberg, 11.1.22

How to Fix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GOP Wants to Raise Benefits age to 70, CBS. 11.2022.

Industry group pitches IPEF enforcement tool, drawing from USMCA, InsideTrade, 10.17.22

Joe Biden attempts the biggest overhaul of America's economy in decades, Economist. 10.2022

Midterm setback hampers GOP trade agenda, Politico. 11.2022.

North Korea Sends Ammunition to Russia, CSIS, 11.2022.

Red states reap inflation bill's green benefits, Politico, 8.18.22

Republican takeover could embolden Biden trade agenda, Politico, 11.4.22

Republican Wave Promises Shifts In America's Energy Policy, Forbes, 11.4.22

Rubio, Smith push back on industry effort to 'weaken' UFLPA enforcement, Inside Trade, November 4, 2022

US Midterm election scenarios, IHS Markit, 10.13.22

U.S. Senator to hold EV battery hearing if GOP takes control, Reuters, 10.19.22

What Divided Government Means for Washington, WSJ, 11.16.22

What Republicans should do about climate post-midterms, The Hill, 10.12.22

What GOP Control of the House Means for Inflation, Taxes, Healthcare, WSJ, 11.17.22

Will Biden's Trade Policy Shift after the Midterms? CFR, 11.17.22

작 성 자

- 워싱턴 무역관 이준성
이인덕

검 토

- 구미CIS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2-035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 ISBN: 979-11-402-0411-3 (95320)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